

최근 남북한 사회·경제 여건의 수량적 비교

Nicholas Eberstadt / 하버드인구개발연구소 미국기업연구소

남북 통일 또는 통합에 관한 논의를 하는데는 그 출발점에 대한 감각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남북한의 사회 경제 여건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남북한간의 격차가 있다면 그 부문들을 연결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남북한간의 사회 경제 여건을 정확히 비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두 가지 문제 때문이다. 첫째는 일반적인 문제로서, 구소련형 경제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비록 서구의 경제 전문가들이 중앙 집중식 계획 경제로부터 나온 결과들을 시장 형태로 전환시키는 다양한 기법들을 개발하였지만, 가격이나 자원 배분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의문은 아무도 풀지 못하고 있다. 둘째는 오늘날 북한에 관한 신뢰할 만한 사회·경제적 정보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이다. 60년대 초부터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는 자국의 경제 여건에 관한 통계 보도를 점차로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어떠한 종류의 발간물도 정기적으로 발간한 것이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나마 공개된 북한에 관한 몇몇 자료조차도 거의 왜곡되어 있어, 과연 북한의 통계 당국이 자국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는지에 의문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우리가 남북한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제대로 비교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비교적 해석이 용이하고 신뢰할 만한 지표를 먼저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두 종류의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목적을 이루려 했다. 첫째는 북한의 통계국에서 수집한 자료를 그대로 북한의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해석하는 것이며, 둘째는 북한의 교역에 있어서 나타나는 소위 '반영 통계(mirror statistics)'를 활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북한과의 교역 상대자들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통계는 북한의 대외 경제 부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문을 추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최근 수집 가능한 자료들이 있는데 바로 북한의 통계 당국이 IMF에 제출한 국민 경제 생산 및 국가 예산에 관한 자료들이다. 이 자료에 많은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검토할 가치는 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 자료는 북한 스스로 자신의 국민 계정을

서방 세계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인구

1993년 북한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의 인구는 2,100만 명이고, 남한은 4,400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남한은 북한에 비하여 인구 밀도가 높고, 여성에 대한 남성의 비율이 더 높은 편이다. 이 점은 어느 정도 6·25한국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즉, 남한에 비해 북한이 피해가 더욱 컸음을 부분적으로 설명해준다.

오늘날 독일의 경우 인구 연령의 중간값(median)은 거의 40세에 이른다. 평균 연령은 남한이 거의 31세로 북한의 27세에 비해 높다. 총인구 가운데 15세 이하의 인구 비율을 보면 북한이 남한보다 높다. 65세 이상의 인구 구성을 보면 남한이 북한보다 약간 높다. 소위 경제 활동 인구라고 볼 수 있는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인구가 총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남한이 북한보다 높은 편이다.

90년대 북한의 가계 평균 구성 인구는 4.7 명이었던 반면에 남한은 3.3 명이다. 남북한 모두 90년대 초반에는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를 능가하는 자연적인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다. 공식적인 자료에 근거해보면,

1993년의 인구 증가율은 북한이 1.4%이고, 남한이 1.1%로서 북한이 약간 높은 편이다. 남북한 모두 6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높은 출산율 국가에서 낮은 출산율 국가로 변해왔다. 60년대 초반의 총출산율(여성 1인당 출생아 수)은 남북한 모두 6에 가까웠다. 남한의 출산율은 1980년 중반에 자연 감소 수준으로 전환되었으며, 현재 1.7이다. 1993년 북한의 경우,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약 2.2명으로 자연 증가 수준을 약간 넘고 있다.

건강과 수명

국민 건강 수준을 단적으로 파악하는 수단으로는 기대 수명을 들 수 있다. 1993년 북한에 관한 센서스의 사전 조사에 의하면, 남자의 평균 기대 수명은 68 년이었고, 여자는 74 년이었다. 이것은 남녀 각각 68 년과 76 년의 평균 기대 수명을 갖고 있는 남한에 비해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통일된 독일의 경우, 남녀의 평균 기대 수명은 각각 73 년과 79 년이었다). 실질적으로 센서스 통계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아 제대로 파악할 수는 없으나, 만일 북한의 최근 식량난이 상당수의 국민을 사망으로 몰고 갔다면, 북한 개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상당히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도시화

도시화 수준이나 그 속도는 한 나라의 사회 경제적 개발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북한의 도시화 수준은 6·25전쟁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남한을 능가하였는데, 70년대 남한이 다시 북한을 앞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도시화 속도를 보면 남한은 급속도로 진전된 반면, 북한은 정체된 경향이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두 나라의 전체적인 개발 형태를 설명해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북한의 도시화가 지난 20여 년 동안 부진하였던 이유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비경제적인 요인들이 있었다. 북한의 경우 가능한 인력을 국가체제 안전 및 군사적인 이유로 동원 하였던 것이다.

북한의 도시화 수준이 남한에 비해 숫자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도시 영역'은 매우 탄력적으로 적용되었고, 이들 영역이 남한에서는 여전히 농촌으로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북한은 1987년 북한 인구의 60%가 도시인으로 간주되었는데, 그 당시 북한인들의 37%만이 인구 10만 이상인 도시에 살고 있었다. 반면에 남한의 경우, 1985년 전인구 가운데 50%가 약간 넘는 수준의 사람들이 도시에 살았으나 1995년에는 거의 총인구의 2/3가 도시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화

북한은 예외적이면서 약간 비정상적으로 군사화된 사회·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북한이 어느 정도 군사화된 상태인가는 군인의 수를 추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70년·80년·90년대에 걸쳐 남한의 군사 병력은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반면에, 북한은 70년대와 80년대에 점진적으로 군사 병력을 키워왔으며, 80년대 후반에는 세계에서 군사 병력이 가장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남한 인구의 절반도 안되는 북한이 남한에 비해 두 배 가까운 군사 병력을 갖고 있다. 이것을 통해 보면, 북한은 전인구의 6%가 군사 병력화된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나라가 되어, 16세 이상 55세 미만의 북한 남자 가운데 거의 1/5이 군인이다.

단지, 오늘날 북한의 군사 병력은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평양의 1993년 센서스 자료에는 북한 병력은 70만에 약간 모자란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서방 정보 관계자는 북한 인민군이 거의 100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어느 수치가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은 군사력 유지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나라임은 틀림없다.

만일 남북한의 평화 통일이 이뤄진다면, 한반도에서 거대한 군사력이 해체되는 모습

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의 경우, 경제 활동 인구의 상당 비율이 다른 생산적인 활동에 투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맞물려, 현재 북한의 자본재 가운데 상당 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군수 산업이 앞으로는 다른 산업으로 전환되든지 아니면 그대로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노동력

〈표 1〉의 내용을 보면, 1993년 북한 전체의 노동력은 1995년 남한의 노동력에 겨우 50%가 약간 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두 나라의 노동력 대부분이 농업에서 비농업 부문으로 이전되어왔다. 하지만, 경제 부문으로의 노동력 분배에 있어서는 매우 상이한 형태를 띠었다. 상식적으로 북한에 비해 남한의 경우가 상업적인 차원의 노동력 배분이

많았는데, 그 비율은 북한 5%, 남한 18%이었다. 특이한 점은 북한의 경우 건설 부문에 대한 노동력 투입이 남한에 비해 훨씬 적었다는 점인데, 이것은 아마도 90년대 북한이 경제난으로 신축 공사 자체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은 중공업 발전에 치중하면서, 다른 어느 산업보다 제조업 부문에서 상당한 노동력을 흡수하였고, 농업 부문의 노동력은 전체의 30%가 넘어 13%도 안되는 남한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국제적인 시각에서 남북한의 노동력 참여율을 비교해보아도 사회주의 국가 가운데서 북한은 노동의 동원력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여기서 나온 동원력 수치는 민간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나온 것으로 생각되지만, 만일 군 병력도 포함한다면 동원 가능한 성인 노동자 수는 훨씬 높을 것이다.

〈표 1〉 북한(1993)과 남한(1995)의 노동력 배분 현황

	북한		남한	
	총 1,000 명	비율(%)	총 1,000 명	비율(%)
총노동력	11,004	100	20,377	100
제조업	4,118	37.4	4,773	23.4
농업	3,381	30.7	2,551	12.5
건설업	464	4.2	1,896	9.3
수송업	402	3.7	1,068	5.2
국영 농장	251	2.3	-	-
상업	509	4.6	3,763	18.4
교육, 문화, 체육업	844	7.7	1,312	6.4
기타	1,305	9.4	5,014	24.8

자료: 북한중앙통계국(1993)과 한국통계청(1996) 자료 참조.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합되는 경우, 분명히 북한 노동 시장의 변화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북한의 노동 참여율이 한국과 거의 비슷하다는 가정 하에서 살펴보면, 200만 명이 넘는 북한의 노동력이 남아돌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거대한 수치가 나왔더라도 실제 노동력 해고 규모를 과소평가한 수치일 수도 있다. 남한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북한의 농민 수가 남한에 비해 약 100만 명 정도가 많으며, 제조업 부문에서도 약 200만 명이 더 많다. 이 같은 경우라면 북한 노동력의 거의 절반 가량이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아예 노동 시장을 떠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비록 북한 노동자의 잠재 생산성에 관한 정보가 거의 존재하지 않더라도, 북한 노동자들의 분배 패턴을 살펴보면 북한 노동자들의 생산성 수준이나 그 추이에 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80년대와 90년대에 농업·임업·수산업과 같은 1차 산업에서의 고용 흐름을 보면 남북한이 대조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1993년 북한 노동자의 1/3이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남한의 경우와 같이 1차 산업에 임업이나 수산업을 포함한다면, 북한의 경우 1차 산업에 참여하는 노동자 비율은 1/3보다 훨씬 더 증가할 것이다.

남한의 경우, 70년대 말의 1차 산업 종사

자는 전체 인구의 35%가 약간 넘는 수준이었는데, 당시의 1인당 총생산은 지금의 1/4 수준이었다. 80년대와 90년대에 농업 부문的高용 인력 감소가 북한보다는 남한에서 더욱 두드러져왔다. 이같은 농업 인력 감소는 다음과 같은 배경에 비례하여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물질적 부의 성취도가 북한보다는 남한이 훨씬 높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지난 20여 년간의 개발 속도가 북한보다는 남한이 훨씬 빨랐다는 점이다.

대외 무역 거래 및 국내 경제 하부 구조

상당히 제한적인 면이 있더라도 북한에 관한 반영 통계(mirror statistics)와 남한의 교역 관련 보고 자료를 통해 남북한간의 경제 비교를 다각도로 할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의 명목 무역 거래 추정치가 달러 베이스로 계상되었는데, 여러 기술적인 이유에 기인한다.

1975년부터 1995년까지 남북한간의 무역 흐름이 상호 대조적임을 볼 수 있다. 지난 20년에 걸쳐 남한의 명목 교역량 규모는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데, 1995년에는 수출 1,300억 달러, 수입 1,500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국제 가격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남한의 경우, 동기간의 실질적인 교역량은 거의 10 배 이상 증가하였고, 1인당 수출입 규

모는 거의 6 배 이상 늘었다. 남한의 경우, 지난 35 년간 경제 개발에 있어서 성공적이었다. 특히, 총교역량 규모가 현저히 증가되었으며 교역의 항목도 선진형으로 바뀌어갔다. 예를 들어, 남한의 수출은 노동 집약적인 농산물 중심에서 기술 집약적이고 복잡한 제조업 물품으로 변해왔다. 북한의 경우, 이아가 좀 다르다. 1995년 북한의 교역량은 남한 교역량의 1%도 안된다. 명목적인 달러 가치로 환산하는 경우에도, 북한의 교역량은 20 년 전에 비해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북한의 경제 개발 접근 방법을 보면 적대적 관계에 있는 상대이든 아니든 얼마든지 생성될 수 있는 국제 교역과 그로 인해 생기는 잠재적인 이윤에 대해 거의 무감각한 편이다.

비록 북한의 교역량이 80년대에 약간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당시 구소련과 북한간의 상거래에 기초한 것이며, 거의 대부분 모스크바의 정치적인 이해 관계에서 나온 것이다. 구소련연방의 몰락과 더불어 북한의 교역량도 급격히 감소하였다. 1995년의 북한의 수출입 규모는 1989년의 규모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도 7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 한결같이 변함이 없다. 금과 마그네사이트와 같은 원광석, 철강 및 시멘트와 같은 단순 제조품, 쌀이나 해산물과 같은 식료품 등이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이다. 비록 북한의 교역량 추

정치로부터 북한 경제를 특정하게 추론하는 것은 비적절한 면도 없지는 않으나, 북한의 교역량 추이를 보면 북한은 경제·기술적으로 정체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한의 경우, 그동안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기계류를 수입하여 자본재의 현대화를 지속시켜왔음을 알 수 있다. 남한의 경우 총수입 가운데 기계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며, 90년대 중반에는 거의 50%에 달하는 상태였다. 반대로 북한의 경우, 1975년이 자본재 수입의 정점이었고, 명목이 아닌 실질 자본재 수입량은 70년대·80년대·90년대로 오면서 오히려 점차 감소한 것 같다. 더군다나 총수입 가운데 자본재가 차지하는 비중도 동기간에 걸쳐 감소한 것 같다. 이같은 결과로 북한은 전세계에서 총자본재 가운데 수입 기계류 비중이 가장 작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 아무리 투자를 장려한다고 해도 산업 생산을 증대하는 데는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북한은 여러 사회주의 국가 가운데 유난히 수입 기계에 의한 자본 투자에 대해 알려지기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이와 같은 결과로, 북한은 기계류 및 자본재의 수출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북한의 1인당 자본재 수출 비중은 아마 20 년 전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일 것이다. 또 주목할 만한 것은 그동안 북한의

수송 장비에 대한 투자가 매우 부족하여 오늘날 북한의 수송 전달 하부 구조는 매우 낙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총생산

최근 평양측이 IMF의 북한진상조사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의 국민총생산 수치는 <표 2>와 같다. 이 자료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이 수치가 군사 경제를 포함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나타나 있지 않고 물가 조정도 없었으며, 총생산의 가치를 달러로 환산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다. 한마디로, 북한은 과연 자기 나라의 총생산 즉 부가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가라는 국제적인 의문에 대해 아무런 해답도 주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이 미해결된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남북한간의 생산 유형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비교가 가능하다.

1993년 남한의 국내총생산은 북한의 16 배가 넘는 수준에 달하였다. 1인당 국내총생산도 남한이 북한의 8 배에 달하였다. 하지만, 남한의 농업 총생산은 북한 농업 생산의 3 배 정도로 남북한간에 큰 격차가 나지 않는 데, ① 남한의 인구가 북한의 인구에 비해 2 배 가까이 많고, ② 남한의 농업 생산물의 가격은 국제 가격에 비해 거의 2 배 가까이 비싸다는 점, ③ 1993년 북한이 식량 위기로 국제 원조를 공표하기 한 달 정도 이전이라는 점들을 고려하면 이 결과는 매우 의아스럽다. 다른 산업 부문에서는 남북한간 대략 20 대 1, 40 대 1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실

<표 2> 1993년 남북한의 공식적인 국내 총생산 규모

	북한	남한	비율(남한 : 북한)
국내총생산(100만 美 달러)	20,935	333,022	16:1
1인당 국내 총생산	990	7,600	7.7:1
부문별 생산(100만 美 달러)			
농업	8,227	23,978	2.9:1
공업	4,689	89,916	19.2:1
건설	1,256	46,290	36.9:1
기타	6,762	173,504	25.7:1
부문별 생산(%)			
농업	39.3	7.0	0.18:1
공업	22.4	27.0	1.2:1
건설	6.0	13.9	2.3:1
기타	39.3	52.1	1.6:1

자료: 한국통계연보(1996), 북한중앙통계국(1993) 및 IMF(1997)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act Finding Report.

질적으로 이들 숫자를 검증할 방법은 없다. 특정한 시간에 남한의 1인당 총생산이 북한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이 중요한데, <표 2>의 여러 자료를 통해 보다 일반적인 가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추론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

공공 재정

북한은 최근 공공 재정 부문에 관한 자료를 IMF에 제출하였다. 비록 그 자료에 관해서는 여러 의문이 있고 여전히 북측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있지 못하다. 북한의 공공재정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남한과 다르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추정된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예산 비율에 있다.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의 공공 지출은 남한이 22%인 반면, 북한은 90%에 달한다. 이것은 국내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이 의외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맺음말

남북한의 사회·경제 여건에 관한 조사들을 살펴보면 분단된 한반도의 상황을 더욱 실감하게 된다. 한 예로,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왜곡되고, 군사적인 경제를 갖고 있는 여러 나라 가운데 하나다. 또 하나 북한의 경

제는 침체되어 있는데, 이는 단지 우방이었던 구소련의 붕괴로 인한 경제 침체만이 원인이 아니다. 그 크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1인당 총생산의 남북한간 차이는 상당하다. 북한은 예외적으로 이동 가능한 성인 노동력을 많이 갖고 있으나, 그 인력들의 생산성에 대해서는 정확히 조사되어 있지 못하다.

첫째로 추정되는 것은 북한의 자본재들은 경쟁적인 시장으로 개방된다면 아마도 거의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북한의 시스템이 시장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북한 노동력은 새로운 일 자리를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앞으로 남북한이 통합되는 경우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完**